

경제관계장관회의

24-10-1

(공개)

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

- 중소기업 → 중견기업 중심 -

2024. 6. 3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현 상황 진단 및 평가	2
III. 기본 방향	5
IV.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	7
1.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	7
2. ^{가칭}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	10
3.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	12
4.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	19
V. 향후 추진계획	22

I. 추진 배경

□ 경제 역동성은 기업과 개인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동성에 기반

○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“창업·중소기업 → 중견기업 → 대기업”으로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

▪ 특히, 기업 성장(Scale-up)은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핵심이며 기업 가치제고의 중요한 수단

* 13~15%의 스케일업 중소기업들이 전체 중소기업 고용증가의 47~69% 설명(OECD, '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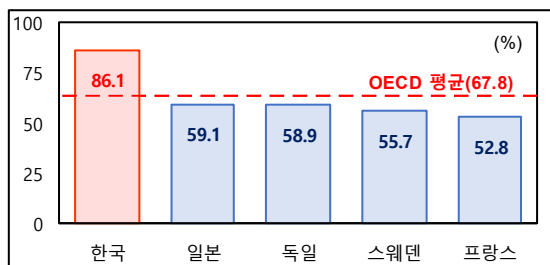
□ 그러나, 중소기업 생산성 부진이 지속되고, 중견기업으로 성장 둔화

○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*은 OECD 최고 수준이나,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% 수준으로 낮음

* OECD 기준(사업체·기업체 혼용)으로 86.1% (OECD 평균 67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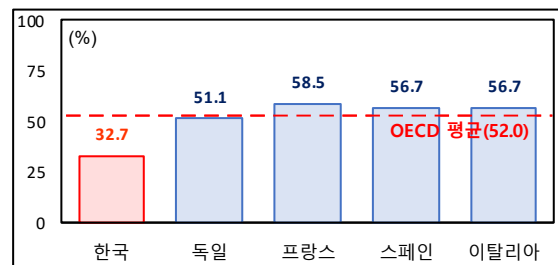
↳ 기업체 기준으로 300인 미만 79%(기업생멸행정통계, '22)로 높은 수준

주요국 중소기업(250인미만) 고용 비중('21년 기준)



* 출처 : OECD

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('21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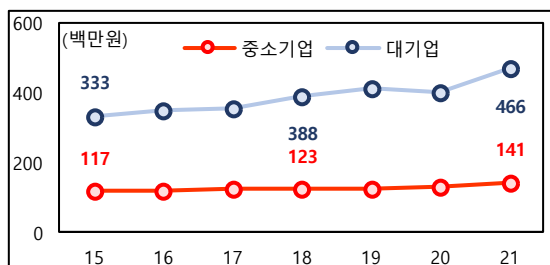


* 노동생산성 = 실질 부가가치 / 종사자 수

* 출처 : 한국생산성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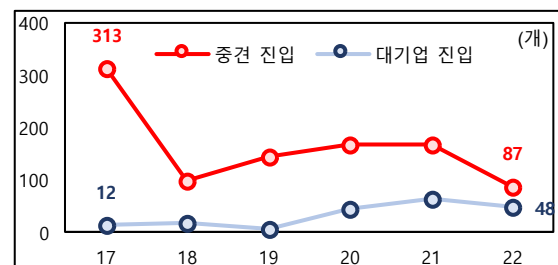
○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소 →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둔화

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



* 출처 : 한국생산성본부

중견·대기업 진입 현황(규모 기준)



* 매출액·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진입한 기업 수

* 출처 : 중견기업연합회

Ⅱ. 현 상황 진단 및 평가

- ◇ 중소기업들이 기업 성장에 필요한 **기술혁신**, **자금조달**, **인력수급**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**신시장·신사업** 진출도 쉽지 않은 상황
 - 기업 성장시 **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** 성장유인이 둔화(「**피터팬 증후군**」) 되고 **분산된 지원사업** 등으로 지원 효율성 약화
- ◇ **성장친화적**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**유망 중소기업**을 **집중 지원**하면 기업성장 활성화 기대

① 중소기업 성장애로: 기술혁신, 자금조달, 인력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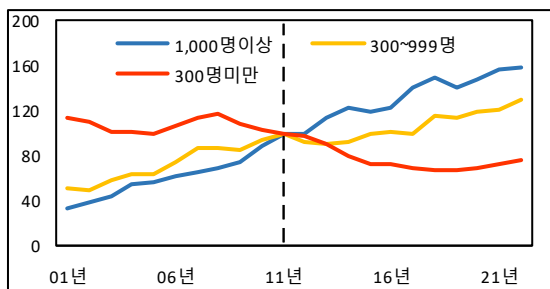
- **(기술혁신)**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R&D 투자가 부진하고, R&D 성공률에 비해 **사업화 성공률이 낮음**

*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(% '22) : (기술개발) 94.9, (사업화) 53.5

- **(자금조달)**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성장 후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하면서 대출과정과 조건에 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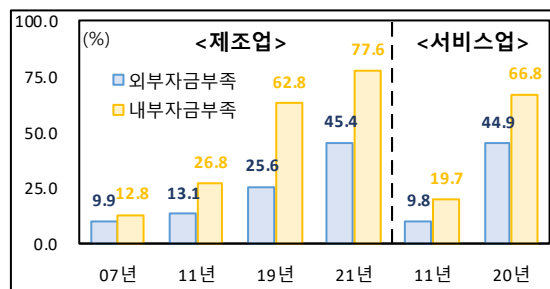
* 기업 규모별 차입 평균이자율(% 한은, '22) : (중소) 3.5, (중견) 4.6, (대) 3.3

종업원수별 업체당 R&D 지출



* '11년 = 100, * 출처 : 한국은행('24)

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저해요인 응답비중



* 출처 : 한국은행('24)

- **(인력수급)**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기업 경영여건이 양호한 경우에도 **우수인력 고용**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유지하는데 애로

* 기업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율(% 산업부, '22) : (중소) 3.1, (중견) 0.9, (대) 0.4

현장의 목소리

- ▶ **중기중앙회 간담회('23.11월)** 비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. 지자체 등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지만, 결국 필요한 것은 인력 수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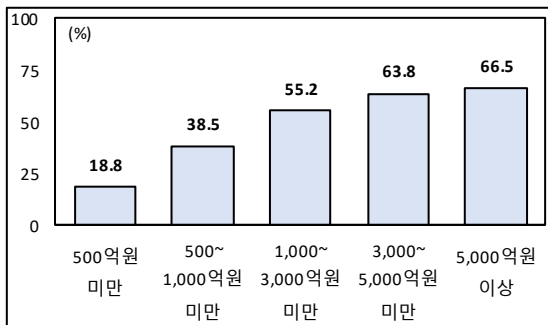
2 협소한 국내시장: 신시장·신사업 진출 필요

○ **(해외진출)** 국내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해외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가 기업규모 성장에 중요한 역할

- 그러나,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 및 마케팅 부재, 자금조달, 법무·회계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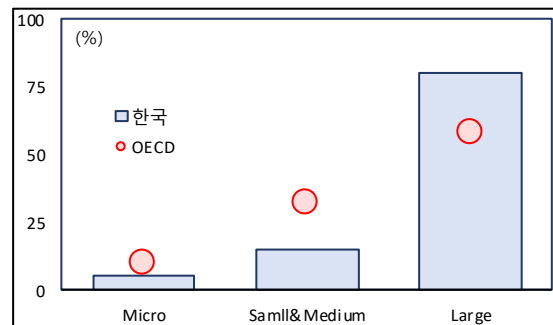
* 해외진출시 필요 지원(중견련, '24) : 세제(31.6%), 금융(27.9%), 마케팅(14.2%), 정보제공(9.0%) 등

매출규모별 수출 중견기업 비중('22년 기준)



* 출처 : 산업부·중견기업연합회

기업 규모별 수출 점유율('20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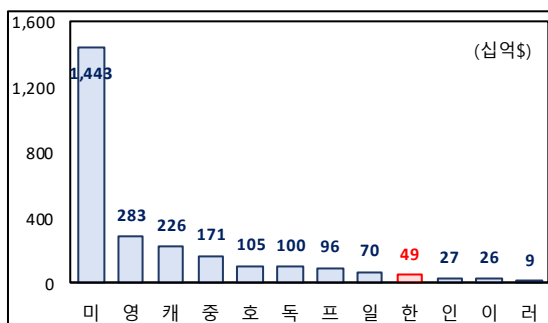
* Micro(1~9인), Small(10~49인), medium(50~249인), Large(250인 이상)으로 분류(OECD)

○ **(신사업)**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줄 수 있는 신규사업 진출, 사업재편 등도 쉽지 않은 상황

- 우리나라는 M&A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
-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* 등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사업 진출, 사업재편,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 측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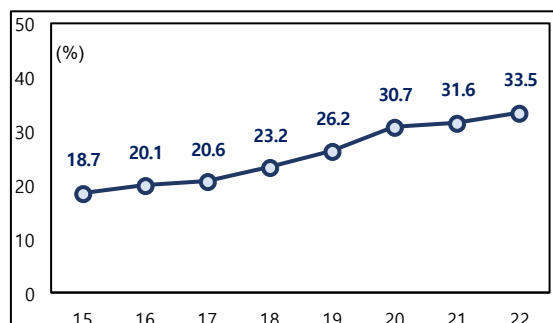
*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 고려 경험(무역협회, '23) : 42.2%

주요국 M&A 시장 규모('23년 기준)



* 출처 : Institute of Mergers, Acquisitions & Alliances

대표자 60세 이상 사업체 수 비중(제조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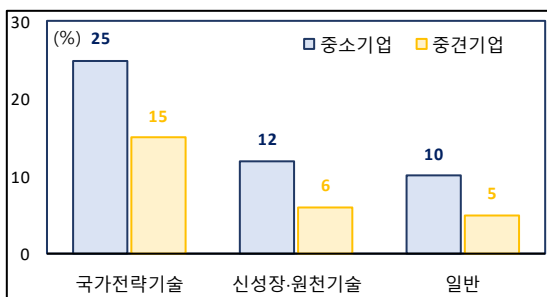


* 출처 : 중소기업실태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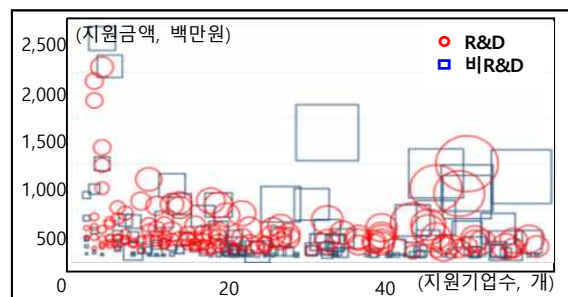
3 세제·재정 지원: 중소기업 성장유인 강화 필요

-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시 세액공제, 재정지원 등 지원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
-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, 기업의 성장·육성보다는 보호 중심 지원들이 많음
- * 정부지원 중소기업의 유사기업 대비 성과(조세연 '24) : (ROA) $\Delta 1.3\%p$, (매출) $\Delta 58$ 백만원
- VC 등 민간 금융기관들은 유망기업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, 정부지원 과정에서의 우수기업 정보공유가 미흡

기업 규모별 투자 세액공제율



중소기업 지원사업별 기업 수·금액('22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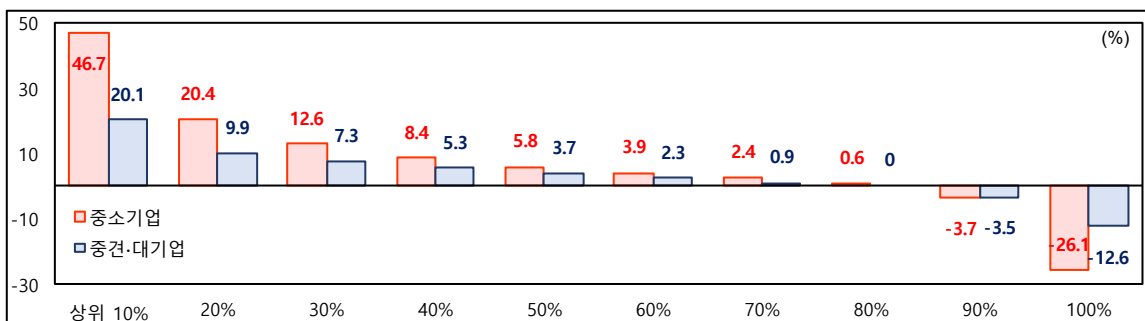
* ○, □ 크기는 지원사업 규모를 의미(KDI)

4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도 다수

- 상위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*(ROA)은 중견·대기업보다도 크게 높은 상황으로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면 빠른 성장 가능

* 총자산이익률(Return On Assets) = 순이익/총자산

중소·중견·대기업 총자산 영업이익률(% 조세연, '20년 기준)



Ⅲ. 기본 방향

- **(정책목표)** “창업·중소기업 → 중견기업 → 대기업”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경제의 역동성 회복 추진
 -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고, 앞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
 - ⇒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 목표
- **(추진방향)** 민간의 선별기능을 활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집중지원,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 유도
 -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및 부처간 협업예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효과적인 지원제도 마련
- ① **졸업 중소기업(초기 중견기업)에 대한 지원 확대**
 -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세제·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고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으로 연계 지원
- ② **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도입**
 - 성장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, 전담 디렉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협력, 바우처 및 관련 사업 집중 지원
- ③ **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요소별 맞춤형 지원 강화**
 - 중소기업 졸업 이후 민간 금융시장으로 자금조달 연계를 지원하고, 민간투자 연계, AI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유도
 - 해외진출 지원 확대, M&A 지원체계 마련 및 가업승계 지원 확대
- ④ **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**
 - 기업 관련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업·민간 금융기관 간 매칭을 지원하고 정부 재정사업 평가 등에도 활용
 - 정책금융 정보, 중견기업 성장시 이용가능 정보 등을 통합 제공

※ (추진 경과) ‘24.1월부터 기업 현장방문(9회), 민간전문가(금융기관, VC 등) 간담회(6회), 관계부처 TF(5회), 연구기관(조세연산업연KDI·중기연), 경제단체(중기중앙회·중견련 등) 간담회(3회) 및 건의를 받아 과제 발굴 및 대책 마련

<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 전략 >



IV.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

1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

- ◇ 성장에 따른 지원 축소가 성장 기피요인이 되지 않도록 졸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지원을 연장하고 릴레이 지원 강화

1 (세제)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 및 졸업시 점감 구조 마련

-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*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(3→5년)하여 기업 부담 완화

*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투자·R&D·고용세액공제 등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('24.下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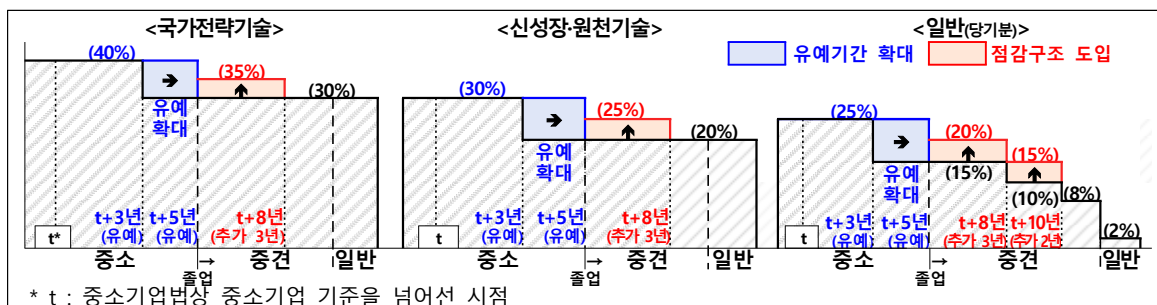
-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·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(총 7년)

-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(추가 3년)* 높은 R&D·투자 세액공제(점감구조)를 받도록 하여 투자 및 기업성장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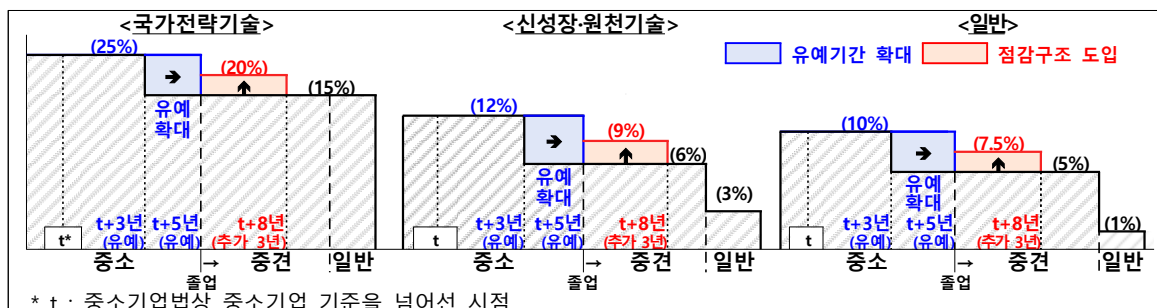
* 일반 R&D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높은 공제율 적용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추진('24.下)

< R&D 세액공제 제도 개편(안) >



<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(안) >



세부담 변화 예시

- '24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기업*의 점감구조 도입 전후 세부담 변화 사례
 * (가정) 10년간 매년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 R&D 200억원, 시설투자 100억원 지속 투자
 ⇒ 5년간 **총 91억원** 세부담 감소 효과

< R&D·투자세액공제율 변화(신성장·원천기술 기준) >

현행(%)	R&D	투자		개선(%)	R&D	투자
중소기업	30	12		중소기업	30	12
중소기업 졸업유예	3년간 30	3년간 12	→	중소기업 졸업유예	5년간 30	5년간 12
중견·일반기업	20	6		(신규)초기 중견기업	3년간 25	3년간 9
				이후	20	6

<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세부담 변화(단위: 억원) >

<기준 초과>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	6년차	7년차	8년차	9년차	10년차
개정前	0	0	0	+26	+26	+26	+26	+26	+26	+26
개정後	0	0	0	0	0	+13	+13	+13	+26	+26

② (유예·판로지원)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및 판로지원 확대

- **(중소기업 정의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개정('24.8 시행)으로,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**유예기간 연장(3→5년)**
 - * 정부 재정사업, 판로지원, 규제, 부담료감면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 유지 효과
-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「**중견기업법**」의 **특례**(현행 14개)도 **확대***(「중견기업법」 개정 추진)
 - * ① 특례기간 연장(3→5년) : 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 기술보호 지원 특례, 「판로지원법」 국외판로 지원 특례, 「이러닝산업법」 중견기업 참여 제한 예외 특례
 - ② 특례 정비신규추가: 「상생협력법」 기술유용 금지 등 2개 정비, 「이공계지원법」 석박사 채용지원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등 4개 신규 추가
- 중소기업 R&D 등 **다년도 사업 수행 중** 중견기업 성장시 **잔여기간 동안 계속 수행**하도록 규정 마련(현재는 과제별 결정)
- **(판로지원)** 신성장 산업 분야* **혁신제품 시범구매**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**2년간('25~'26년)** 허용하고,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 검토
 - * 차세대 모빌리티, 우주항공, 양자기술, 첨단의료, AI, 차세대 물류 등
- 물품 뿐만 아니라 **용역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** 형태로 **공공조달시장에 참여** 가능하도록 허용(중기부 고시개정, '24.下)

3 (재정사업) 중소기업 졸업기업 대상 점감구조 및 릴레이 지원체계 도입

○ (점감구조) 기업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차이 축소

-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

< 고용촉진장려금 개선(안) >

	현행			개선		
(지원대상)	우선지원 대상기업*	대규모기업	➔	우선지원 대상기업	중견기업	대규모기업
(연 최대지원액)	720만원	360만원		720만원	720만원	360만원

* 중소기업 및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, 300명 이하 광업·건설업 등(일부 중견기업 포함)

-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개편하여 모든 훈련과정*에 대해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 점감화(100 ~ 300만원 차등 지원)

* 직무능력 향상 관련 모든 과정에 대해 사후 인증시에도 지원(온라인·외국어 과정 제외)

- 정부 R&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(매출액 3,000억원 이하)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

< R&D 현금부담 비율 개선(안) >

	현행				개선		
(대상)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→	중소·(신규)초기 중견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(부담비율)	10%	13%	15%		10%	13%	15%

○ (사업연계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 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

< 재정사업 릴레이 지원(예시) >

분야	중소기업	중견기업	연계(안)
R&D	· 중소기업기술혁신 R&D	· 중견·중소 상생혁신 도약 R&D · 월드클래스플러스 R&D	▶ 기업선발 별도트랙 신설
수출 인력	· 중소기업수출바우처 ·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	· 중견 수출바우처 · 중견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	▶ 선발 과정 가점우대

◇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·예비 중견기업을 100개 선정하여,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3년간 밀착관리

□ (네트워크)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, 투자유치, 협업기회 등 사업기회 제공

○ 네트워크 풀에서 기업별 특성 및 도전요인에 맞는 전담 디렉터 매칭

※ 전담 디렉터 후보자(안)

① (기업인) 주요 기업 임원 출신으로 분야별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
(IT벤처, 자금·재무, 디지털·AI, 인사·노무, 해외판로 등)

*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(대기업 대표 및 임원 퇴직인력 등으로 구성) 등과 협업

- 중견 → 대기업으로 도약에 성공한 기업 등으로 네트워크 지속 확대

② (민간 투자자) 사모펀드, 벤처캐피탈(VC, CVC) 등

*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기업 선정 및 도약 지원 병행

③ (분야별 숙련 전문가) 해외 법률·회계·재무·M&A 등 성장 분야별 전문가 및 공공 연구기관, 정책금융기관 등

□ (기업선정) 성장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·신사업 진출, 기술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선발

* 정책금융기관, 회계·재무 전문가, VC·CVC 등 민간 전문가 중심 평가위에서 기업 선정
↳ 기술수준·혁신역량 등 객관적 평가 → 성장의지가 높은 기업 선정

○ 민간투자(VC·CVC 등)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 등을 우대하여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 활용

□ (지원내용) 전담 디렉터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, 네트워크 풀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집중지원

○ (스케일업 전략) 기업별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, M&A·해외 진출·재무관리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 지원

- **(네트워크 지원)**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하여, 문제해결, 기술협력·이전,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
 - * 전문가 그룹의 기업 네트워크, CVC 계열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기업 간 공동 R&D,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협업 지원
- **(바우처 지원)**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*를 발급하여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 지원 (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)
 - * 바우처 한도 내에서 M&A, 해외진출, 재무관리, 특허(IP), R&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 후, 소요비용 지원
- **(재정사업 우대)** 수출, 인력, R&D, 융자·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, 가점부여 등 우대 (부처간 MOU체결 등)
 - * (수출) 해외 판로개척 지원, 수출 마케팅지원 등 수출지원 사업 우선선발·가점 부여 (R&D) 기업 성장지원 R&D 사업 내 전용트랙, 가점부여,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 (자금) 유망 중소기업 융자 상환기간 연장, 신산업진출설비투자 등 자금지원 우대선정

<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>

네트워크	<p>▶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 등 성장기회 제공</p> <table><tr><td>시장·경영 전문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장분석· 마케팅 지원</td><td>—</td><td>회계·재무 전문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회계정보 제공· 자금조달 다각화</td><td>—</td><td>민간 투자기관(PEVC 등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투자유치 기회· M&A 등 사업기회</td></tr><tr><td></td><td>해외사업 전문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사업 경험· 주요국 사업정보</td><td>—</td><td>공공 연구기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술 협력·이전· 기술 상용화</td><td>—</td><td>대기업·중견기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 동반 진출· 공동 R&D</td></tr></table>		시장·경영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장분석· 마케팅 지원	—	회계·재무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회계정보 제공· 자금조달 다각화	—	민간 투자기관(PEVC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투자유치 기회· M&A 등 사업기회		해외사업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사업 경험· 주요국 사업정보	—	공공 연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술 협력·이전· 기술 상용화	—	대기업·중견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 동반 진출· 공동 R&D
시장·경영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장분석· 마케팅 지원	—	회계·재무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회계정보 제공· 자금조달 다각화	—	민간 투자기관(PEVC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투자유치 기회· M&A 등 사업기회									
	해외사업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사업 경험· 주요국 사업정보	—	공공 연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술 협력·이전· 기술 상용화	—	대기업·중견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 동반 진출· 공동 R&D								
기업 선발	<p>▶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성장 의지가 높은* 유망 중소·예비 중견기업 100개</p> <p>* 민간 선별기능 및 지원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(VC·CVC)를 받은 기업을 우대</p>												
디렉터 선정	<p>▶ 네트워크 풀에서 기업별 특성 및 도전요인에 적합한 전담 디렉터* 매칭</p> <p>* 주요 기업 임원 출신 현장경험 있는 기업인, 민간 투자자(사모펀드, VC 등), 분야별 숙련 전문가 등</p>												
지원 내용	전담 디렉터 <p>▶ 기업 특성에 맞는 민간 전담 디렉터 매칭</p>	바우처 지원 <p>▶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 발급</p>											
	스케일업 전략 <p>▶ 기업 상황에 맞는 스케일업 전략 수립</p>	기존 정부사업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수출지원 사업우선 선발·가점 부여▶ R&D 사업 내 전용트랙 마련▶ 정책금융 우대(우선 투자 대상 선정)▶ 기술보증기금 지원 등											
	네트워크 활용 <p>▶ 네트워크 연계 사업기회 제공</p>												

3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

◇ 자금혁신·인력 등 기업 생산능력을 제고하고, 신시장·신사업 진출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

(1) 성장력 제고

① (금융) 기업 성장과정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릴레이 지원 강화

○ (대출) 기술력·혁신성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기관 대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장 유도

- 중진공·기은이 산은·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*

* 중진공·기은이 매출수출고용 성장률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 명단을 산은·시중은행에 제공 등

※ (참고) 중견기업 전용 은행권 저리대출 프로그램('24.4.1일 시행)

▶ (지원 규모)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

▶ (지원 내용) 업체당 최대 1,500억원까지 1%p 금리를 우대하여 대출 지원

- 재무제표보다 혁신성·성장성 등을 고려한 기술기반 자금공급을 확대*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우대조건 자금을 제공

* 높은 기업수요('24.4월말까지 총 7조원 집행)을 고려하여 '24.2월 발표한 공급목표('24년 총 16.3조원) 이상으로 확대 공급 추진(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 합계)

○ (펀드)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도록 펀드 투자 방식 개선

-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(5대 시중은행+민간, 5조원) 20% 이상을 예비·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

* '25년 이후 결성분부터 예비·초기 중견기업 우선공급 비율(20%) 배정

- 유망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(지분투자)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성장 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사의 보수구조 등 인센티브* 개선

* 혁신성장펀드: ①기업당 50억원 이상 투자가 전체 목표결성액의 20% 이상 되도록 주목적 투자에 규정 ②기업가치 500억원 중소중견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추가보수 지급 등

- **(보증)**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천억원 신규보증 지원('25)
- 예비·초기 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보증 한도 확대

<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보증지원(기술보증기금) >

	스타트업	빌드업	스케일업	중견 후보	유예기업
보증한도	10억원	50억원	100억원	150억원 ^{신규}	200억원 ^{신규}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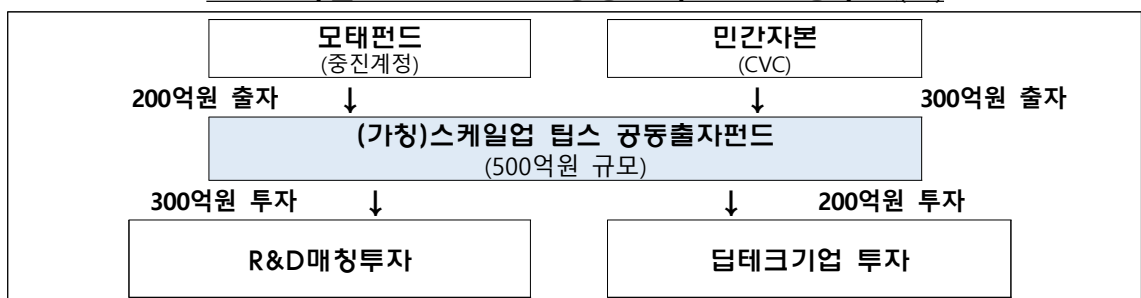
※ 신용보증기금은 '24.2월 개정

- **(P-CBO)** 중소기업 전용 '일반 P-CBO*'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'성장사다리 P-CBO'로 개편하여 6천억원 규모 공급('25)
- *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
- 신·기보가 직접 P-CBO를 발행하여 발행금리 인하 추진
(최대 $\Delta 0.5\%p$, 「신용보증기금법」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 개정 필요)

2 (기술혁신) 민간 선별기능 활용 R&D·AI 확산 등으로 기술혁신 유도

- **(민간투자 연계)** 민간투자 연계형 R&D를 확대*하고 사업방식 다양화
- * TIPS 특화지원대상(기간·지원한도 우대)을 딥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R&D 분야로 확대
-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,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팀스*에 CVC 공동출자 펀드 도입('24년, 500억원)
- * 민간 VC 先투자 → 後정부 매칭 지원(모태펀드+출연R&D) 방식으로 지원

< (가칭)스케일업 팀스 CVC 공동출자펀드 운용구조(안) >



- 원활한 R&D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방식 지원확대* 및 R&D 성과와 융자조건을 연계한 방식 도입 추진**
- * 성장지향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융자방식 연구개발 지원확대
- ** (예시) R&D 성과와 융자조건(이자, 상환기간 등)을 연계한 R&D 융자 프로그램 도입

- **(기술료 개선)** 우수 R&D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하향 조정*하고 기술료 납부 우수기업 지원강화

* (현행) 중소 5%, 중견 10%, 대 20% → (개선) 중소 2.5%, 중견 5%, 대 10%

- 기술료 납부 우수 중소·중견 기업*이 다른 R&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또는 연구비 사용·정산 절차 간소화** 등 인센티브 부여

* (예시) ①기업별 납부한도의 70% 이상 납부 또는 ②개발 종료 후 2~3년 내 완납

** R&D 자율성 트랙 대상에 포함시켜 자체정산 허용, 연구비·연구자 변경 자율성 부여

- VC, PE 등 민간 투자·금융기관에 기술료 납부 우수 기업의 정보를 제공(개별기업 동의 전제)하여 투자유치 지원

- **(사업화 촉진)**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*를 확대하고, 기술 사업화 중심으로 R&D 제도 개편

* 과제 선정·평가지 시장·산업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40%이상으로 확대(산업부, 중기부)

- 양적 R&D 중심에서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공공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(KOSBIR*) 개편방안 마련('25)

* 300억원 이상 R&D 예산 운영하는 정부·공공기관 소관 R&D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('98년 도입, '14년 의무화)

- **(디지털·AI 활용)** 디지털 전환 사업을 One-Shot 방식*으로 개편하고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추진('24.3분기 육성방안 마련)

* (현행) 5년간 점진적 지원 → (개선) 일시지원(최대 5억원) 통해 기업 자율성 제고

- 권역별 AI 센터('24년 1개)의 전문가 컨설팅*을 통해 전문인력,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AI를 활용한 생산관리 개선 지원

* 스마트공장 기획지원·구축·사후관리 등 전주기 컨설팅 및 DX 역량평가

※ AI 활용 사례 : 불량품 자동선별 및 원인분석, 선제적 설비·장치 고장 예측, 실시간 재고관리 및 재고 규모 최적화 등

3 (인력공급) 중소·중견기업의 국내·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

- **(국내인력)** 현장의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
 - **(계약학과)** 설치 가능 산업체 범위를 확대*하고 대학-기업 협력을 지원하는 '계약학과 지원센터' 설립('24.6월)
 - * (현행)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만 설치 → (개선) 기업부설 연구기관 포함
 - **(연구인력)** 기업맞춤형 연구인력의 양성·취업을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 거점형 '연구인력혁신센터(R&D Brain Care Center)' 신설('24.上)
 - * 충남 호서대, 전북 전북대, 경남 창원대, 충북 교통대 등 4개소
 - **(계약정원제)** 계약정원제* 업무 매뉴얼 구축(계약학과 지원센터), 대학 대상 간담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
 - *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히 산업체 필요 인재 양성('23.5 도입 → '23.9월 대학원, '24년 학부 시행)
 - **(기술사관)** 신산업·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기술사관* 지속 육성
 - * 직업계고(2년) + 전문대(2년) 연계하여 기술인력 양성('24년 17개 사업단)
- **(외국인력)** 외국인 인재 매칭 지원 등 외국인력 유치 확대
 - 중소기업과 외국인 유학생간 일자리 매칭 지원 및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이 많은 해외 인재 지속 발굴
 - 외국인 유학생 대상 중소기업 현장연수·취업박람회 개최,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구축('24.下)하여 외국인 유학생-중소기업 매칭
 - 인도·베트남 등 현지대학-재외공관 연계를 통해 해외 인재 발굴
 - 연내 실태조사(산업부) 결과를 토대로 뿌리업종 중견기업*의 고용허가 범위 확대 검토
 - * 현재 뿌리기업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(300인 이상)도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(E-9, H-2) 신청 가능

[2] 신시장·신사업 진출 지원

① (해외진출)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해외 판로지원

- (수출금융) 안정적 자금조달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
 - 중진공·기보와 수은·무보 간 MOU를 체결하고, 수출성과가 좋은 유망 수출기업을 서로 추천하고 금융지원 우대('24.下)
 -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급망팩토링 상품 신청시 절차 간소화 및 '찾아가는 설명회' 등을 통해 팩토링 이용 활성화('24.下)
- (해외진출) 내수·수출초기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현장애로 해소 강화

현장의 목소리

▶ 중기중앙회('24.5월)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전시·상담회 등 해외 바이어를 만날 기회 확대가 가장 중요

- (시장개척) 내수 초보기업 전용 '수출 첫걸음관' 등 지원 확대* 및 중소·중견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

* 2024 G-Fair 등 전시·수출 상담회에 수출 초기기업 전용관 구성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('24년 900개사 → '25년 1,000개사)

** 중기중앙회·중견련과 협업하여 시장 선정시 중소·중견기업 수요 반영

- (해외인증) 해외인증지원단* 공동설명회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, 산단·테마별 공동설명회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설명회 개최

* 민관 합동으로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전과정의 애로 지원('23.4월 발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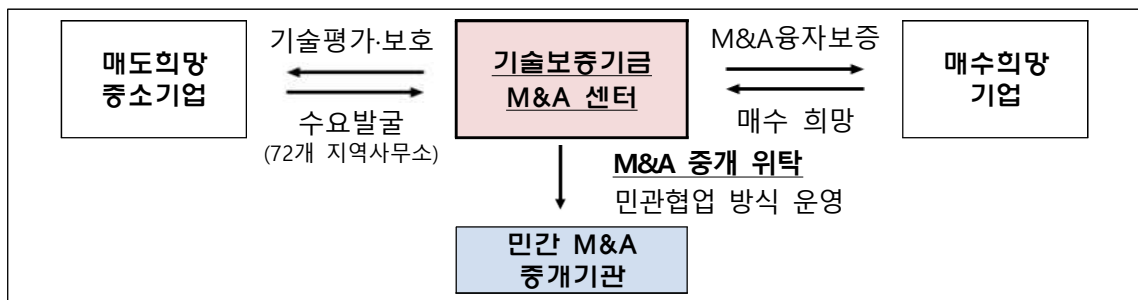
- (법률 자문)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(3년)까지 확대*하고 수출바우처(산업·중기부)와 연계 강화

* (현행) 중소기업만 대상 → (개선) 중소기업 + 초기 중견기업(졸업 후 3년 이내)

2 (M&A·가업승계) M&A를 통한 신산업 진출 및 안정적 가업승계 지원

- (M&A 중개)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M&A 중개 활성화
 - 기술보증기금 M&A 전담센터를 마련('25.上)하고 민간 M&A 중개기관과 협력*하여 가치평가, 자문, 특례보증 등 지원
 - * (기보) 매도·매수 수요발굴, 기술보호, 자금지원 등 ↔ (민간) 매칭, 협상 등 중개

< 기술보증기금 M&A 전담센터 운영체계(안) >



- 기술보증기금-기업은행* 간 업무협약을 체결('25.上)하여 M&A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간 지원 연계** 추진
 - * 'IBK M&A 플랫폼'을 중심으로 희망기업 발굴, 자문중개 및 금융지원까지 원스톱 지원
 - ** (기보) M&A 특례보증, 기술평가·보호 ↔ (기은) M&A 특별대출, 자문, 중개·주선
- (자금지원) 중소기업 M&A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·보증지원 강화
 - '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'(기은)을 2년간 0.3조원 신속 집행(당초 3년간 0.3조원)
 - '가칭기업승계형 M&A 특례보증*'을 신설(기보, '24.12월)하여 중소기업의 기술·노하우·고용 승계 지원
 - * 대표자가 고령인 기술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수자금 조달 지원
- (가업승계) 스케일업 기업(예시: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)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* 등 확대 검토
 - * (현행)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
 - 중소·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*의 범위 확대 검토
 - * (현행) 임대용 부동산, 과다보유 현금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, 건물 등 자산

③ (사업재편)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전적 구조개선 유도

- 고금리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'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' 확대
 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상기업 선별 및 구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자(VC, PE) 및 정책금융기관(기보, 지신보) 참여 확대
 - * 협업기관 : (현행) 11개 민간은행 → (개선) VC, PE, 기보·지신보 추가
 -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립적 기관이 채권단과 공동 금융지원 협의 등을 지원하는 '맞춤형 프로그램'으로 확대 추진
- 금년 조성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(총 1조원 규모)의 주목적투자 대상에 사업전환기업*도 포함하여 원활한 자금공급 유도
 - * 「중소기업사업전환법」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
- 신산업 진출·디지털 전환 등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「기업활력법」상 성장지향형 사업재편 활성화
 - 공급과잉·산업위기지역에만 적용되던 인수·합병 절차 간소화 등 「상법」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(기업활력법상)에 확대 적용('24.7)
 -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* 신규 지정, 지역은행 참여 확대**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지역기업 지원 강화
 - * (현재) 종합지원센터(서울) → (개선) 동남권 등 주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순차 지정
 - ** (현재) 5개 시중은행 → (개선)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은행 참여 확대

④ (상생협력) 대·중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- (상생협력기금)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*로 상생협력기금**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 제공('25년)
 - * 정부 정책목표에 따라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중점 지원 검토 (예) 대·중소 공급망 ESG 도입, 신사업 진출 위한 제품화·사업화 지원
 - **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기금
- (신시장 동반진출) 대·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시장 진출, 신제품 개발 등 상호 윈윈형 상생모델을 발굴하여 윈윈아너스* 선정 우대
 - * 동반성장 우수모델 '윈윈아너스'로 선정 우대 → 동반성장 유공 포상 연계

4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

- ◇ 정책금융기관의 **기술평가·재무정보**, **중소기업 지원정보** 등 개방을 확대하여 **유망기업·금융기관 매칭**을 지원
- ◇ **정책금융 통합포털**을 구축하여 수요기업에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, **중견기업 진입시 혜택**에 대한 **종합정보** 제공

(1) 중소기업 정보 제공

현장의 목소리

- ▶ **벤처캐피탈 간담회('24.2월)** “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을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소극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경향”
“민간투자자들 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,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도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”

- **(기술정보)** ^{가칭}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¹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·VC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^{*}(기보)

* ('24.3분기) 기보 회원기관 대상 시범운영 → ('25.上) 전체 금융기관 및 기업 대상 확대

- 기업별 기술에 대한 등급·지수 정보와 평가보고서 제공

< 기업 기술평가 주요내용 >

① 기업혁신역량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지수화하여 제공 ▶ 다른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 위치정보와 분석의견 제공
② 기술사업성등급	▶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사업성 등급 및 평가의견 제공
③ 기술원천성등급	▶ 기술의 핵심성, 독창성, 파급성, 부가가치 창출을 분석하여 원천성 등급과 분석의견 제공

- ⇒ 중소기업은 자가진단, 보증 가능성 판단 등에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보유기술력에 대한 평가정보를 통해 신규 투자처 발굴 가능

□ **(재무정보)** 신용정보원의 재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(산업단위 → 기업단위 추가, '24.下)하고 시중은행·민간 투자기관(VC) 등 제공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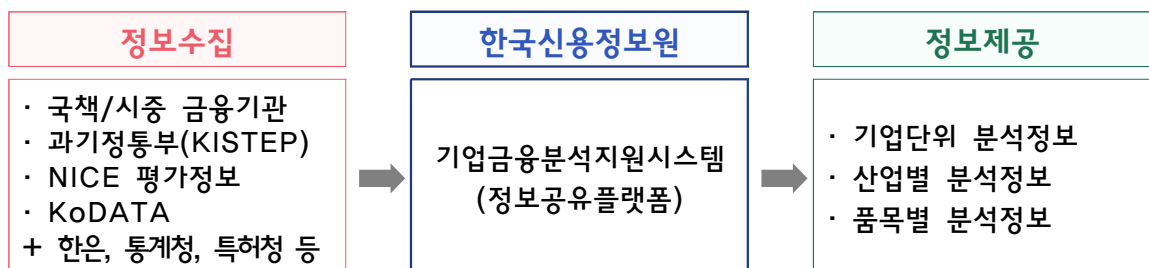
○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*를 통해 시중은행은 여신심사, 민간 투자기관은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 가능

* 기업일반정보(사업내용, 주요제품, 관계회사 등), 신용/재무정보(기업등급, 동일산업 내 재무비율 등), 경쟁사·유사기업 정보, 금융안정지수 등

○ VC 등 소규모 민간 투자기관의 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이용요금 차등화*

* (예시) 현재는 전체 운영비를 이용기관간 균등부담하나, VC 등 소규모 민간 투자기관에는 차등 부담하는 방안 도입 등

< 신용정보원 정보공유플랫폼 업무흐름도 >



□ **(지원정보)** 지원이력 관리 목적이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(SIMS)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*하고 민간에 개방('24.下)

* (현행) 매출액, 자본금 등 10종 정보(연1회) → (추가) 업종, 수출 등 17종(월1회)

○ 비식별화된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민간 플랫폼·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(오픈 API) 및 중소기업 동향 분석·정보 등 제공

○ 기업 요청시 해당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정보를 민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요청기업의 투자유치·대출심사 등에 활용 유도

○ 지원이력 통합분석을 통해 기업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부처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

[2] 수요기업 편의 제고

현장의 목소리

- ▶ 수출기업 A社('23.11월)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 전담 부서가 없어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, 정책금융 관련 홍보가 거의 없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
- ▶ 수출기업 B社('23.11월) 정책금융 정보를 백화점식 정보 나열이 아닌, 수출-내수, 대출-이차보전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맞춤 정보 검색이 가능할 것

- (정책금융 통합 포털) 정책자금 신청의 접근성·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'중소벤처24'에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내용을 통합 제공*

* '중견기업 정보마당'에도 중소기업24 정책금융 지원서비스 링크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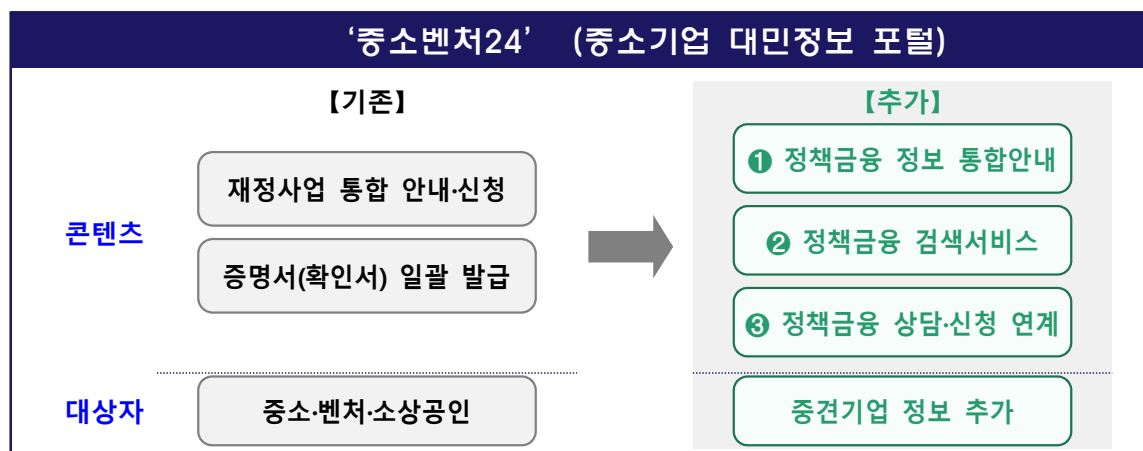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을 우선 연계('24.下)하고, 다른 정책금융기관(수은·산은·기은·신보·무보 등)으로 연계 확대('25년)
- 나열식 정보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당기업 조건에 맞는 금융지원 정보를 맞춤형 제공 추진

< 검색 필터(안) >

구 분	내 용
① 기업분류	▶ 중소기업 ▶ 중견기업 ▶ 소상공인 ▶ 예비창업자 ▶ 창업기업 등
② 근로자 수	▶ 1~49명 ▶ 50~99명 ▶ 100~199명 ▶ 200명 이상 등
③ 추가 조건	▶ 낮은 이자율順 ▶ 공고 마감임박順 ▶ 최신공고 업로드順 등
④ 기타 검색조건	▶ 검색대상(전체, 제목, 내용 등) ▶ 검색기간 등

-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 상담·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 지원

< 중소기업24 통합포털 개선(안) >



- **(종합정보 제공)** 중견기업 성장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, 특례·우대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
 - **(온라인)** '중소기업마당·중소벤처24' - '중견기업정보마당' 연계 강화하여 정책금융, 특례·우대 정보 정확도 제고
 - '중견기업정보마당'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, 정책금융, 특례·우대, 재정사업 등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 정보 제공
 - 중소벤처24의 정책금융·재정사업 정보 안내를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 - **(오프라인)** '중견기업 첫걸음 지원데스크'(중견련)를 확대개편* 하여 중견 진입기업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안내('25.上)
 - * (현재) 단순 전화안내 → (개선) 유관기관 합동 중견 첫걸음 설명회 개최, 전담 상담 창구(중견련) 운영 등

V. 향후 추진계획

□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

- 금번 대책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

< 향후 발표 예정 주요 정책과제 >

정책과제	발표 시기
·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	'24.6월
·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계획	'24.6월
·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	'24.6월
·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	'24.3분기
·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	'24.3분기
· 3차 투자활성화 대책	'24.3분기
· 반도체·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	'24.下

- ※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「역동경제 로드맵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「경제관계장관회의」 등을 통해 지속 점검·보완

1

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•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)	기재부	'24.下
• 코스피·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2년 추가유예 연장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)	기재부	'24.下
• R&D·투자세액공제 3년간 점감구조 마련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)	기재부	'24.下
•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(3→5년) (「중소기업기본법」 개정안 시행)	중기부	'24.8월
• 「중견기업법」상 특례기간 연장 및 신규특례 확대 (「중견기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)	산업부	'24.下
•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	중기부	'24.下
• 신성장 산업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견기업 참여 확대(2년) (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개정)	조달청	'24.下
• 중견기업 상생협력형 시장참여 확대 (「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」 개정)	중기부	'24.11월
• 고용촉진장려금·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 개편	고용부	'25.上
• 초기 중견기업 정부 R&D 사업 현금납부 비율 완화 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개정)	과기부	'24.下
• 중기부-산업부간 유사 재정사업 릴레이 지원	중기부 산업부	'25.1월~

2

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•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	중기부	'24.下~

3

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① 성장력 제고		
• 중진공·기은-산은·시중은행 MOU 체결	금융위	'24.下
• 중견기업 전용 펀드에 우선공급 비율(20%) 배정	금융위	'25.~
• 정책펀드 운용사 보수구조 개선	금융위	'24.下
• 신보·기보 P-CBO 직접 발행 허용 (「신용보증기금법」, 「기술보증기금법」 개정 추진)	금융위 중기부	'24.下~
• 스케일업 보증 한도 확대	중기부	'24.下
• TIPS 특화지원대상 확대	중기부	'25.上
• 스케일업 팁스 - CVC 공동출자 펀드 도입	중기부	'24.下
• 융자방식 R&D 지원 확대	산업부	'25.上
• R&D성과 - 융자조건 연계한 R&D 융자프로그램 도입	중기부	'25.上
• 정부납부 기술료 하향 조정	과기부	'24.上
• 기술료 납부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인센티브 부여	중기부 산업부	'24.下
• R&D 과제 선정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	중기부 산업부	'25.上
•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(KOSBIR) 개편방안 마련	중기부	'25.上
• 디지털전환 사업 One-Shot 방식으로 개편	중기부	'25.上
•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방안 마련	중기부	'24.3분기
• 계약학과 설치가능 사업체 범위 확대	교육부	'24.下
• 계약학과 지원센터 설립	교육부	'24.6월
• 연구인력 혁신센터 신설	중기부	'24.6월
• 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매칭 플랫폼 시범구축	중기부	'24.下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② 신시장·신사업 진출 지원		
• 중진공·기보 - 수은·무보 MOU 체결	기재부 중기부 산업부	'24.下
• 수출 첫걸음관 등 확대 및 수요반영 무역사절단 파견	산업부	'25.上
•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지원대상 확대	법무부	'25.上
• 기보 M&A 전담센터 마련	중기부	'25.上
• 기보 기업승계 M&A 특례보증 신설	중기부	'24.12월
• 「기업활력법」상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 지정	산업부	'24.下
• 상생협력기금 연계사업 신설	중기부	'25.上
• 원원아너스 선정	중기부	'24.下

4

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① 중소기업 정보공유 확대		
•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정식 오픈	중기부	'25.上
• 신청원 정보공유플랫폼 이용요금 개편	금융위	'24.下
② 수요기업 편의제고		
•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	중기부	'24.下
• 정책금융 통합포털 수립	중기부	'24.下~
• '중견기업정보마당'에서 맞춤형 정부지원 정보 제공	산업부	'24.下
• '중소벤처 24' 정보안내 범위 확대(초기 중견기업 포함)	중기부	'24.下
• '중견기업 첫걸음 지원 데스크'(중견련) 확대개편	산업부	'25.上